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3파전'

박상천 '합의 추대' 요구에 당내 반발
김영진·문희상 의원 합류 경선 불가피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국회 부의장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박상천 대표 이외에 김영진 당선자와 문희상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경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박 대표가 7월 6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 부의장에 합의 추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영진 당선자와 문희상 의원이 경쟁 대열에 합류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급격하게 경선 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구 민주계를 대표하는 박 대표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은 물론 구 열린우리당 출신 중진 및 당선자들과의 대면접촉을 늘리고 있다.

경선으로 가기 전에 당내 대세론을 선점해 합의 추대로 판을 정리하겠다는 것. 박 대표 측근도 "경선이 아니라 무조건 합의추대로 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표의 행보가 그의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 합당 과정에서의 앙금은 물론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박 대표에 대한 당내 비토 세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일부 당선자들도 박 대표의 국회 부의장 진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당선자는 광주지역 당선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16일부터 수도권 당선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득표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 당선자는 "부의장 경선에 나설 생각을 굳혔다"며 "후배들이 국회의장을 맡는 상황에서 대표까지 지낸 박상천 당선자가 부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 출신으로 광주에서 당선된 김 당선자가 국회 부의장 경선에 나설 경우, 박 대표의 지지 기반을 잠식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당초에는 대표 경선 출마를 적극 검토했으나 최근 국회부의장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 의정부 갑에서 4선 고지에 오른 문 의원은 수도권 및 열린우리당계 의원들 사이에서 폭넓은 기반이 있어 부의장 경선에 나설 경우 의외로 득표력일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추미애 광주서 잇단 특강 '당권 경쟁' 시동

통합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추미애 당선자와 정세균 의원이 광주에서 대학 특강과 지지층 만남 등을 통해 당권 경쟁 시동을 건다.

4년의 공백을 딛고 컴백, 정치적 부활을 꾀하고 있는 추 당선자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의장을 지낸 정 의원은 이번 광주 방문에서 각각 '야당다운 야당',' 투쟁 능력 있는 야당' 등 당의 새로운 정체성과 리더십을 주장하며 '당권 주자' 이미지를 심을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당선자는 15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전남대 선거정치연구소 초청으로 사회과학대에서 '21세기 세계화시대 한국경제의 진로와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추 당선자는 대구와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방위적, 가치지향의 리더십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 의원도 오는 17~18일 광주를 찾아 당원 만남, 국립 5·18 묘지 참배 등에 이어 27일 광주에서 전남대 선거정치연구소 초청으로 대학생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날 강연을 통해 '강한 야당'에 어울리는 이미지와 당의 새로운 정체성, 리더십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공개적인 활동보다는 당내에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광주 방문을 전국 순회 및 공개 활동의 신호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5·18 기념행사, 마찰없이 잘 치러졌으면"

■5·18 기념재단 윤 광 장 이사장

"5월 정신의 상징인 민주·인권·평화정신이 결코 훼손되어선 안됩니다. 5·18 기념행사가 마찰 없이 잘 치러졌으면 합니다."

5·18 기념재단 윤광장(66) 이사장은 14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기념행사가 자칫 시국·공안과 관련된 갈등의 장으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윤 이사장은 "5월 행사가 사회적 현안에 맞물려 치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럴 때 5월 정신이 더 빛이 날 수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와 2003년처럼 5월 정신이 훼손되고 학생 등의 기습시위로 인해 행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또 "5·18 행사를 전후로 대학생들과 진보단체 등이 광주로 몰려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에 오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에서 5월 정신을 기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것이 곧 우리가 표방하는 5월 정신의 전국화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5·18 기념사업 예산 30% 삭감안과 관련, 그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정부의 원칙없는 예산 삭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5·18 28주년 행사가 끝난 뒤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예산 삭감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광주 5월 정신을 전세계에 알릴 미래 인재인 청소년 교육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 재직시절 광주 학생들마저 5·18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연중 계기수업을 비롯 전국 고교생 토론회 등 청소년 교육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5·18 민중항쟁에 대해 "지도자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시민들이 군과 싸워 해방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약탈 없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보여 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5월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념재단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는 "최근 취임식 파행 등 아픔을 겪었지만 개의치 않고 5월 관련 단체들과 화합하고 협의해 함께 이끌어 가겠다"며 "5·18 기념재단이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우면서 5월 정신과 가치를 물려주는 곳으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지난 4월 30일 제9대 5·18 기념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윤 이사장은 교사 출신으로, 민주교육 광주·전남교사협의회 회장, 5·18 민중항쟁 구속자 동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사진=위직량기자 jrwi@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 문제를 언급하는 김학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친박 '선별 복당' 추진키로

'全大 이전 복당 불허' 철회…친박계 "일괄 복당해야"

한나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7월 전당대회 이전 복당 불가론을 사실상 철회하고 18대 국회 원구성 추이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종전 전대 이전 복당 불가라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나, 박 전 대표가 요구해 온 일괄 복당이 아닌 '선별 복당'이어서 향후 박 전 대표 측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 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 복당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대상을 받아들이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18대 국회 원구성 추이를 보아가면서 당 윤리기준과 정체성에 맞는 인사를 받아들이겠다"며 "받아들이는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이전이냐 이후냐 얘기는 그만하고, 18대 원 구성 추이를 봐가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선별 복당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복당 대상 원칙과 관련,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고 윤리적 기준에도 맞고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등을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새 원내대표가 뽑히고(22일) 나면 그런 문제들이 다 검토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계는 "진전된 조치"라면서도 "일괄 복당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이지만 한편으론 복당 논의에 물꼬를 튼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박 전 대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일괄 복당이 원칙임을 강조했으며 우리 입장은 일괄 복당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FTA 보완은 커녕 쇠고기 문제로 되레 악화"

임채정 국회의장,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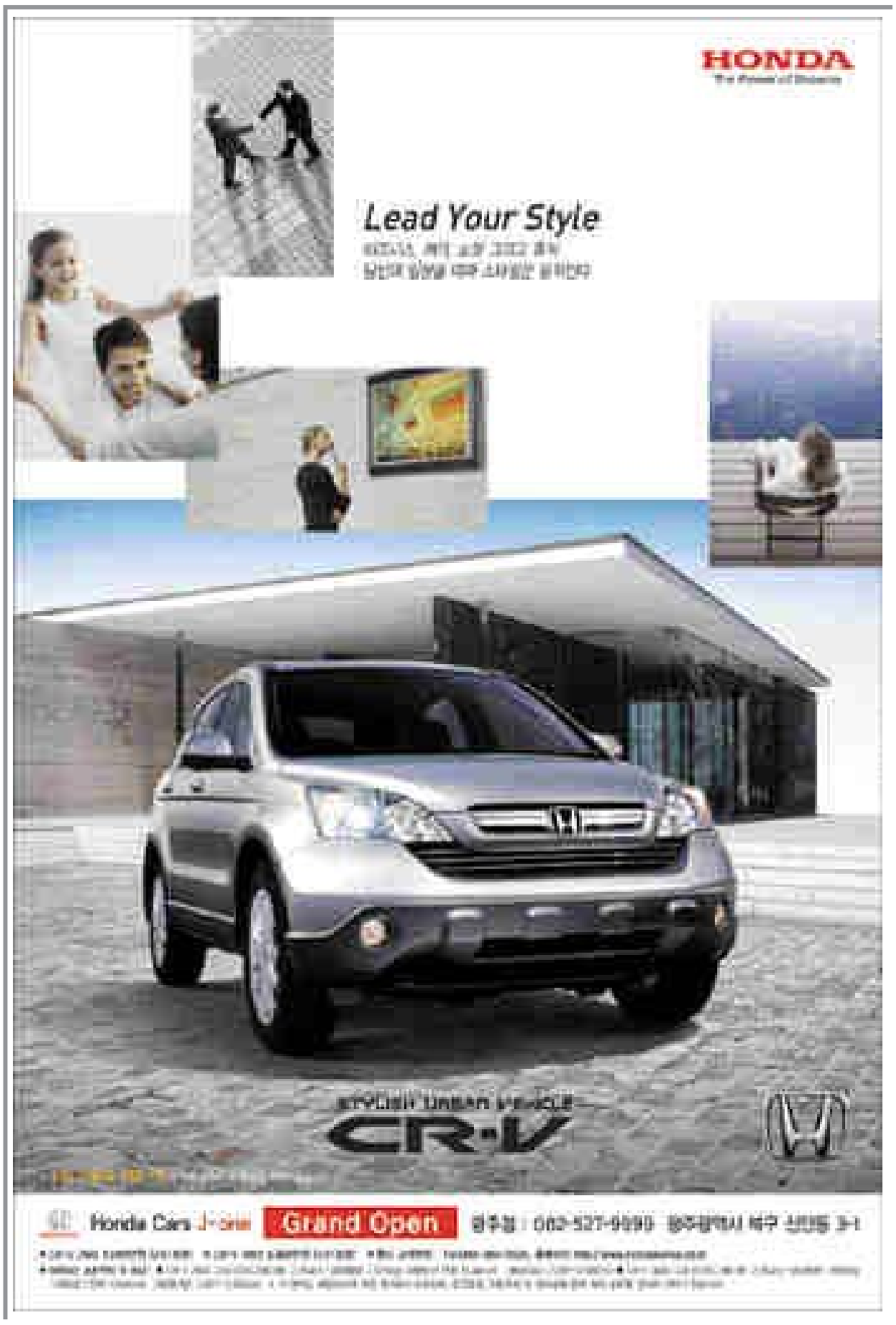
임채정 국회의장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쇠고기 문제가 터져 보완은 커녕 악화의 길로 가고 있어서 유구무언"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가진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국제적 다자관계 속에서 한국은 대처해야 할 때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감추고 쉬쉬하다가 뒤늦게 갈팡질팡하다 보면 이를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국민과 합의하는 비용의 몇 배가 된다"며 "정부는 왜 과거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배웠다면 실천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고생들의 촛불시위를 일탈로 보면 안된다"며 "변화의 시대에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이기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으니 정부는 변화의 물결을 알아차리고 그 단초를 찾아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권에 대해서도 "국민 민생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2분법적 분류 보다는 강자와 약자, 남과 북,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의장은 학위수여식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